

“가둠을 넘어 회복과 예방으로” …교정 패러다임 전환

- 법무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발표
- 단순한 수용관리서 벗어나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으로 교정 패러다임 전환
-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교정행정 혁신,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도 추진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본 계획은 계획적이고 투명한 교정정책 수립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제20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6월 대표 발의하여 2019년 통과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어 2020년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이행하였음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치료·재활 시스템으로 교정 혁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정시설 구현,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도입, △현장 근무자를 위한 교정공무원 처우·복지 개선, △개방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교정정책 등의 7대 전략과 그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정책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장관으로서 교정의 대혁신을 이루어 수용자의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열악한 교정공무원의 처우도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4대 목표 1부.
별첨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1부.

담당 부서	교정본부	책임자	과 장	양원동	(02-2110-3366)
	교정기획과	담당자	교정관	김상원	(02-2110-3458)



비전

교정의 가치 창출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

교정정책 4대 목표



7대 추진 전략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범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치료·재활 시스템으로 교정 혁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정시설 구현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AI와 첨단기술 도입	현장 근무자를 위한 교정공무원 처우·복지 개선	개방성과 다양성을수용하는 교정정책
① 인권의식 및 수용자 방어권 향상 ② 의료체계 및 보호장비 개선	①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재범예방 및 사회 재통합 ② 산업수요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직업훈련	①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체계 확립 ②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구조 개선	① 과밀수용 해소를 통한 인권처우 강화 ②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수용환경	① AI 교정 통합 플랫폼 구축 ②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정 디지털 혁신	① 한단계 도약하는 교정 조직 ② 교정공무원 역량 강화 및 처우 증진	① 교정정책 투명성 강화 및 국민 공감형 정책 실현 ②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정홍보 정책 및 이미지 개선

“구금을 통한 교정·교화에서 치료·재활 통한 회복과 예방”

재범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강력사범(마약·도박·알콜·성폭력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넘어 치료·재활 중심의 재범 예방 정책을 아래와 같이 강화할 계획입니다.

1. 마약 등 “중독재활” 기능 강화

- (중독재활) 마약 등 중독 재활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중독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을 넓혀 재범 억제 효과 강화
- (치료연계) 치료 연계형 처우 향상 목적으로 교정시설 내 상담·평가를 고도화, 외부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연속성 확보
- (교육훈련) 재발 방지 교육·훈련과정을 충동조절, 유발요인 관리 등 재발예방 계획 수립 등 인지·행동 기반 재활 강화
- (전문인력) 중독 상담치료가 가능한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교정공무원 대상 전문상담 교육 역량을 강화

2. 교정·교화 프로그램 고도화

- (맞춤처우) 수용자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인지행동 프로그램, 분노조절, 성폭력·강력범죄 재범방지 등 표준화된 처우 적용
- (심리상담) 우울·불안·충동성 등 재범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 연계를 통해 교정 내 정신건강 지원 확대
- (직업훈련) 출소 후 생계 기반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 및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확대 강화

3. 출소 후 연계 강화

- (출소전 사회복귀) 출소 예정자에 대해 주거·취업·치료(중독)·가족관계 회복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개별 사회복귀 계획 마련
- (지역사회 연계지원) 출소 후에도 중독·재활 치료·상담이 이어지도록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치료의 단절 최소화

목표 ② 30년까지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정시설 운영체계 구축 완수”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인 교정시설 조설 및 수용환경 개선 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1. 2030년까지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 (시설조성) 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 건립을 단계적·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용환경 조성
- (시설개선) 교정시설 신축·이전·증축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수용공간 확충

2. 수용환경 개선 및 인권 친화적 교정환경 조성

- (환경개선)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용거실 환경 개선 및 생활시설 개선 정책을 지속적 추진
- (의료보건)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 정책을 추진
- (맞춤처우) 고령·장애 등 취약 수용자에 대한 맞춤형 처우 정책을 확대하여 인권 친화적인 수용환경 조성

3. 안전한 교정시설 운영체계 강화

- (안전관리) 교정시설 내 위험요인 사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교정사고 예방 기능 향상
- (관리체계) 안정적인 교정시설 운영을 위해 수용질서 관리체계 및 시설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 (보안강화) 교정시설 보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첨단 보안기술을 활용한 교정 시설 운영체계 구축

목표 ③ AI 등 도입을 통한 첨단교정 구축

“교정행정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교정환경 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정행정 효율성과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체계 구축, 미래 교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AI기반 교정행정 시스템 구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 AI 기반 교정 통합 플랫폼 구축

- (통합관리) 교정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I 기반 교정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정책지원) 교정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정책 분석 체계 강화
- (행정지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교정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지능형 행정 지원 시스템을 단계적 도입

2. AI·ICT 첨단기술 교정시설 운영 체계 구축

- (지능형관리)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용자 정보 관리와 시스템 체계를 고도화하여 체계적인 수용자 정보 관리 환경 구축
- (업무효율성) 교정시설 운영 및 행정 업무 전반에 정보화·디지털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 (디지털혁신) AI·빅데이터·지능형 시스템을 활용한 교정행정의 운영방식을 혁신하고 현장 중심의 첨단 디지털 교정체계 전환

3. 교정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

- (정보시스템) KICS 교정 정보시스템 기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기관간 관련 업무 처리 연계성 강화
- (인프라구축) 교정행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반과 시스템 환경 단계적 구축
- (디지털역량) 교정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교육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미래 교정행정 환경에 대응 기반 마련

“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교정행정 수행 기반 마련”

교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교정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체계, 근무여건, 처우개선 등 현장 중심의 교정행정 운영 기반을 아래와 같이 강화할 계획입니다.

1.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근무여건) 교정시설 현장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공간, 휴게 공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근무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하여 업무수행 여건 개선
- (업무환경) 현장 근무자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무인력 운영의 합리적 조정, 근무체계 개선, 행정업무 간소화, 불필요한 행정업무 정비 등 추진

2.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 (복지확대) 교정공무원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 복지 지원 체계 강화
- (사기진작) 교정행정 발전과 현장 업무수행에 기여한 교정공무원에 대해 포상 확대 및 성과평가 반영,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등 사기 진작 도모

3. 교정조직 운영체계 개선

- (조직혁신) 교정행정 조직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을 재정비 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 효율성 도모
- (현장지원) 교정시설 현장 중심의 교정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정책기획·연구 등 본부의 기능과 지방교정청의 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수행 소속 기관의 업무 지원체계를 확고하게 구축
- (현장중심) 정책 집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기관장 및 부서장 회의 시행 등 본부와 교정시설 간 협업체계 활성화